

# 국가폭력과 대중들의 자생적 저항

최정기

근대 이후의 국가가 그 이전의 국가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통치권을 가진 지배세력이 합법적 폭력 행사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사회 자원의 통제와 국내의 사회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이다(Giddens 1991: 11). 이런 폭력수단은 한편으로는 국가 외부의 적을 겨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내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3세계의 국가안전보장(National Security) 논리가 외부의 적에게서 국가를 지킨다는 의미를 가짐과 함께 내전을 향한 군사배치라는 점(Corradi 1992: 43)은 그런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근대 국가가 외부의 적과 전쟁을 하는 것이나 내부의 적을 향해 '추악한 전쟁'<sup>1</sup>을 하는 것 모두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생명을 잃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20세기는 인류 역사상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살상이 가장 많았던 세기로 기록될 것이다.<sup>2</sup> 물론 드러난 폭력의 형태는 다양하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비롯한 수많은 전쟁의 와중에서 저질러진 대량 학살과 파괴 행

1 이것은 아르헨티나 군부가 안전보장을 위한 좌익 소탕이라는 명분으로 1976~1982년 사이에 저지른 인권 탄압, 즉 3만여 명의 학살 및 실종 사건을 지칭하는 개념이었다. 이후 이 개념은 권위주의적인 독재세력이 권력 유지를 위해 저지른 유사한 사례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위들, 스탈린주의 및 제3세계 권위주의 체제에서 볼 수 있는 고도로 억압적인 국가 폭력과 테러통치, 핵무기의 위협 등이 그것이다(김영범 1999: 23). 그 폭력의 논리는 일종의 절멸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특정 종족이나 민족, 종교집단, 정치적 반대자 등을 표적으로 끝장을 내겠다는 것이다.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5·18도 동일한 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이들 사례들과는 비교하기 곤란할 정도로 규모도 작고 살상의 성격도 다르지만, 민간인이 공권력의 정의롭지 못한 폭력에 의해 살해됐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사실 5·18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 중 하나는 학살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그에 대한 저항의 문제이다. 그런데도 5·18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물들은 거의 대부분 학살의 문제보다는 저항의 문제에 주목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5·18을 딛고 성립된 정의롭지 못한 국가권력과 대결구도 속에서 사회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죽음 속에서 한 가닥 빛을 보여준 당시의 항쟁을 강조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입장은 1980년대 이후 5월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된 사회운동의 주요 동력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형식적인 수준에서나마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이 이뤄지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사법적인 복원이 이뤄진 오늘날의 시점에서는, 질문의 형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즉 지금까지의 5·18 연구가 그것이 지닌 특수성에 주목했다면, 이제부터는 다양한 사회과학적 질문을 통해 그것이 지닌 이론적 함의를 풍부하게 하고, 5·18 문제를 인류사의 보편적인 문제로 제기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 출발점은 계엄군의 학살 행위와 무고한 시민들의 죽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폭력 및 제노사이드<sup>3</sup>를 극복하는 것은 21세기를 맞이한 인류가 그 전 세기에 이어 여전히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사회운동론의 흐름 속에서 5·18이 갖는 의미를 검토하려는 의도에서

2 아렌트는 20세기를 '전쟁과 혁명의 세기' 라고 했던 레닌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전쟁과 혁명의 공통분모는 폭력이기 때문에 20세기는 동시에 '폭력의 세기' 가 됐다고 말한다(Arendt, 1999: 24).

3 원래 제노사이드 개념은 '멸족'이란 의미로 종족이나 민족 등의 집단학살을 가리키는 개념이었지만, 1950년대 이후 개념의 외연이 확장됐다. 이제 그 개념은 '반란 집단을 포함해 적대관계의 정치적 집단'(Haff and Gun, 1988) 및 그와 관련됐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들을 대량으로 살해하는 것을 의미하며(김영범 1999: 24~26), 나아가 제3세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권력의 장악 및 유지를 위한 민간인 살상에도 제노사이드 개념이 적용된다.

기획됐다. 그것은 구조적 원인 혹은 무차별적인 불만을 원인으로 제시하거나, 항쟁 자체에만 관심을 가졌던 기존 사회운동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기존의 사회운동론은 실제로 있었던 사회운동을 소재로 해 구성됐기 때문에 사회운동의 가능한 유형을 모두 포괄하지는 못한다. 특히 5·18과 같이 국가 폭력에 의한 제노사이드가 행해지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런 폭력의 행사에 저항했던 경우를 설명할 수 있는 분석틀은 찾기 어렵다. 본 연구는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가폭력에 대한 대중들(multitude)<sup>4</sup>의 자생적 저항의 가능성을 찾고자 하며, 그 과정에 개입하는 변수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결국 본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노사이드와 같은 극심한 국가폭력 아래에서 사람들이 저항할 경우, 그런 행동 유형을 규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구조적 유인인가, 지도자들의 전략적 기획인가, 아니면 폭력에 대한 분노인가? 둘째, 이 경우 사람들의 참여 기제는 무엇인가? 개인의 합리적 선택인가, 계급적 자발성인가, 아니면 시민들 사이의 네트워크나 조직이 중요한가? 셋째, 이들 변수들은 항쟁의 발생뿐만 아니라 항쟁의 종료 과정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 5·18 당시 광주 지역에서의 항쟁과 대중들의 참여 과정을 중심으로 대답하고자 한다.

## 저항의 기제: 정당성과 네트워크, 그리고 촉발 계기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5·18 연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이뤄졌다. 그 하나는 1980년 5월 이후 정부 및 각종 국가장치들에 의해 왜곡되고 은폐됐던 당시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회과학적인 접근틀을 이용해 5·18을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다. 진실을 규명하려는 연구물들을 제외한다면, 사회과학적 연구의 대표적인 성과들로는 계급론적인 패러다임의 연구성과들(정해구 1990;

4 기존의 사회과학에서 사용하는 대중(mass) 개념이 무차별적인 개개인의 집합으로 비합리성을 의미한다면, 여기서 사용하는 대중(multitude) 개념은 독특성을 가진 개개인들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복수성과 다양성, 그리고 창조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네그리(A. Negri)는 기존의 맑스 해석에서 나타나는 노동자계급 주도성과 대중/전위의 대립구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중(multitude)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 1968년 혁명의 주체는 노동자나당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구조에서 소수자(minority)였던 대중들이며, 그 대중들은 각기 자신의 다양한 욕망을 분출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Negri 1996: 151~153; Negri, 미간행 번역물: 13~14).

손호철 1995)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연구성과는 5·18이 지닌 의미의 재해석을 가능케 하고 1980년대 사회운동의 진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첫째, 이들 연구들은 추상 수준이 높은 구조와 참여자들의 행동을 직접 연결시킨다는 한계가 있다. 즉 장기적인 구조 분석을 통해 곧바로 중·단기적인 국면 및 행동을 설명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5·18과 같은 단기간의 비조직적인 대중봉기를 여타 사회운동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연구는 학살과 저항을 분리해 사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앞서서도 지적했지만 5·18은 두 사건의 결합으로 설명해야 한다.<sup>5</sup> 즉 국가권력의 대항자인 군인에 의해 민간인 테러 및 살상이 발생한 사건과, 대중에 의해 그에 대한 저항이 발생한 사건이 결합해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계엄군의 잔인함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학살을 강조하다가도 항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저항 행위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항쟁이 발발한 원인이나 시민들이 참여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인들에 의해 행해진 폭력을 전제해야만 하는데, 기존의 연구들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그 점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왜 광주에서만 폭력을 수반한 격렬한 저항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다. 5·18은 무차별적인 폭력과 살상을 행하는 계엄군에 대항해 대중들이 비조직적이고 자발적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한 사건이다. 따라서 참여자가 갖는 심리적 부담도 역시 죽음을 각오해야 할 만큼 컸을 것이다. 그렇다면 평상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참여가 어떻게 가능한가? 당시 동일한 억압이 전국에 걸쳐 가해졌지만, 왜 광주에서만 그 폭력에 저항할 수 있었는가? 기존의 연구는 이런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몇몇 연구자에 의해 전개되고 있으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역시 몇 가지 한계를 보

---

5 폭력의 정치와 절대적 공동체를 이야기한 최정운(1999)의 경우에도 폭력은 중심적인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담론이나 시민들의 항쟁, 절대공동체 등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이고 있다. 한상진(1998)과 최정운(1999)은 모두 극심한 폭력 아래에서 형성된 투쟁 자체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승인투쟁’(Struggle for Recognition) 혹은 ‘절대적 공동체’로 개념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논의는 ‘해방 광주’에 대한 탁월한 설명과는 달리, 26일 밤 죽음을 각오하고 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설명하기에는 몇 가지 난점이 있다. 나아가 왜 광주에서만 승인투쟁 혹은 절대적 공동체의 형성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정근식(2000b)은 이런 한계를 지적하면서, ‘5·18’을 저항(18일~21일), 공동체의 형성(22일~26일), 무력진압과 시민군의 자기희생(26일 밤~27일 새벽)이라는 세 개의 국면으로 구별하고, 마지막 국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근식은 항쟁의 의미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발발 원인이나 주민들의 동원 및 참여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의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계엄군에 의한 테러와 시민들의 죽음이라는 문제에서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이 경우 사건에 대한 인과적인 설명보다는 비인간적인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의 자생성(spontaneity)과 자율성(autonomy), 직접행동의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다.<sup>6</sup> 사실 프랑스의 1968년 5월 운동 이후 인과적인 틀 내에서 저항행위를 설명하기보다는 참여자의 직접행동, 즉 반란(revolt)에 강조점이 주어지는 경향이 있다(Guattari & Negri 1995: 41~58). 5·18과 같이 비조직적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무장봉기의 경우, 이런 설명이 더 설득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국가폭력에 의해 제노사이드가 일어난 경우, 대중의 직접행동이 뒤따른다는 일반화된 가설은 성립할 수 없다. 제노사이드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은 저항보다는 굴복과 순응의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폭력은 그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을 낳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보다는 공포와 굴종을 유발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렇다면 과도한 국가폭력으로 공포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대중들의 저항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즉 어떤 조건에서 사람들은 폭력의 행사에 저항하거나 굴복하는

<sup>6</sup> 사회운동의 자생성과 자율성, 대중의 직접행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계급론적인 틀에서는 이런 형태도 구조적 모순과 대중의 의식적인 저항의 한 형태라고 생각한다. 이에 비해 네그리는 대중권력, 대중의 다양성과 아우토노미아 등의 개념을 통해 대중의 잠재적 힘을 특권화하면서 대중운동의 자생성과 자율성, 직접행동을 강조한다(Guattari & Negri 1995: 53~58, Negri, 1996: 34~39).

것일까? 또 폭력적인 저항이 발생했을 때, 대중들의 참여 및 동원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기존의 사회운동론과 5·18 관련 연구 및 자료들을 통해 검토해 보면, 5·18에서의 참여 및 동원과정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가폭력을 벗어나 주민들 사이에 동원 가능한 네트워크가 존재하는가이다. 이와 관련해 굴드(R. V. Gould)는 저항 행위의 계급 기원설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이웃 연결망' (neighborhood network)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Gould 1993). 최정기(1997)가 5·18 당시 항쟁의 확산 기제로 설정한 지역 네트워크나 최정운의 절대적 공동체론(1999)은 이런 이웃 연결망 개념의 수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굴드는 파리 주민들 내부의 다양한 세력 배치와 그들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는 반면에, 지역주의의 영향(최정기 1997)이나 외부에서 가해진 가공할 폭력(최정운 1999)으로 인해 시민들 내부의 차이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즉, 저항의 과정에서 네트워크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지만, 그것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것이 항쟁 과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5·18 당시 주민들 사이에 국가폭력으로 형성된 저항적인 네트워크라는 변수를 통해 항쟁의 발발과 전개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도덕적 정당성의 문제이다. 즉, 폭력을 가하는 집단이나 폭력의 대상이 되는 사회 집단이 스스로에게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문제이다. 이때의 도덕적 정당성이 보편적인 성격을 가져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 정당성을 가져오는 신념 체계 혹은 이데올로기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또 정의에 반하더라도 대중들의 통념상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는 행위는 도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저항의 주체들이 스스로 정의와 관련된 신념 체계를 갖고 있는가, 나아가 그를 통해 스스로에게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런 신념 체계를 항쟁에의 참여를 통해 실천하는가의 여부가 관건이 된다. 예를 들면 한국전쟁시기에 무고하게 학살당한 사람의 가족들이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대중적 통념 속에서 저항하지 못하다가 최근 인권주의적 담론이 대중적 통념으로 되면서 저항하기 시작한 것을 들 수 있다.

셋째, 대중의 자생적 저항을 촉발하는 구체적인 계기들이 만들어지는가의 여부이다.<sup>2</sup> 이 계기들은 조직적인 형태일 수도 있지만, 비조직적인 형태일 수도 있다. 사실 모든 조직적인 저항은 대중의 자생적인 저항과 결합할 때에 비로소 저항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특히 5·18과 같이 일상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국가폭력의 사태에서 대중들이 예상치 못하게 비조직적이고 폭력적인 저항을 일으킨 경우, 이런 계기는 운동을 주도하는 체계적인 조직보다는 대중들의 소규모 분산적인 저항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 특정 조직이 주도하는 경우에도, 예정된 계획에 의한 저항이기는 하지만 조직이 대중의 운동을 따라가는 형태일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하면, 우연적인 사건들이 결합하면서 폭력적인 저항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상 세 가지 변수들은 개별적으로는 직접적인 국가폭력의 행사에 대해 저항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 되지만, 이들 변수들이 상호 결합할 때에는 저항 행위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저항 및 참여과정에 대한 분석

### 1) 지역주의와 저항적인 공동체의 형성

비인간적인 폭력에 대해 생명을 건 저항이 발생할 경우, 그런 저항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의 존재를 전제해야 한다. 물론 일상적 수준에서 작용하는 주민들 사이의 네트워크 그 자체는 지배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저항적인 네트워크 혹은 저항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네트워크를 토대로 하지만 그것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만 한다. 1980년 광주 의 경우,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요인들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5·18 직전의 학생 시위를 통해 형성된 민주화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 및 그에 대한 시민 스스로의 확인이었다. 둘째는 김대중의 구속이 이 지역 주민들에게 제기하는 효과였다. 셋째는 국가권력이 사용하는 폭력의 문제인데, 이것은 다시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국가권력의 폭력 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 여부이며, 다른 하나는 그런 폭력 행사가 무차별적인가 아니면 선택적인가 하는 것이다.

---

7 자원동원론에서 대중의 불만은 항상적인 요소이며 사회운동의 성공 여부는 그런 불만의 조직화를 담당하는 기획자(entrepreneur)에게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계기를 만들어내는 운동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갖는 특성으로 볼 때 오히려 비조직적인 형태의 계기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1980년 5월 광주 지역에는 민주화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와 학생 시위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지지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그런 공동체의 가능성이 현실화된 것, 그리고 개별적인 수준에서 동의나 지지를 보내고 있던 시민들이 서로의 의사를 확인한 것은 전남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도청을 비롯한 시내 일원에서 개최한 ‘민주화 대성회’였다. 당시 광주 지역의 시위는 진압경찰과의 충돌로 갈등구조가 표면화된 타 지역과 달리,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평화적으로 전개됐으며 그 과정에서 학생운동과 시민들 사이에 강한 연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특히 16일 밤의 햇불 시위를 마친 다음 민주화에 역행하는 정국의 반전이 일어날 경우에는 시위를 재개할 것 등 이후의 행동지침이 결정됐다는 것은 5·18의 발발과 관련해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다음으로 김대중 구속은 적어도 광주·전남 사람들에게는 민주화과정이 중단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한 이래 70년대 전 기간에 걸쳐 감금과 가택연금을 당한 김대중은 당시 민주화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런 인식은 그의 출신 지역인 전라도에서 특히 강했다. 따라서 5월 18일에 전해진 ‘김대중 구속’이라는 소식은 대부분의 지역민들에게 곧바로 그때까지의 민주화운동이 거부되고 유신 체제와 같은 정치 체제로의 복귀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와 함께 전해진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sup>8</sup> 소식은 그런 인식을 더욱 강화시켰으며, 대다수 지역민들에게 커다란 좌절과 분노를 야기했다.

마지막으로 국가폭력의 잔인함과 무차별성이 저항공동체의 형성에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근대 국가가 그 자체가 폭력의 독점이지만, 문제는 그런 폭력의 행사가 사회적 수준에서 동의를 획득해야만 한다는 데 있다. 국가권력이 행사한 폭력이 일반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행위로 규정될 때, 그만큼 저항의 가능성은 커진다. 또 무차별적인 폭력의 사용은 폭력의 대상이 될 사회집단으로 하여금 강력한 운명공동체를 형성하게 하고 저항의 가능성을 높이는 반면에, 선택적인 폭력의 사용은 그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5·18 당시 계엄군의 폭력은 광

8 당시 민주화운동의 주된 요구 중 하나는 ‘비상계엄 철폐’였다. 그런데 별다른 상황 변화도 없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 것은 민주화운동의 요구에 대한 거절을 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주 지역민들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지만, 그 행사 방식도 매우 잔인하고 무차별적인 형태로 진행됐다. 그 결과 당시의 진압작전은 그만큼 높은 저항의 가능성을 내포한 상태였다.

이 변수들 중 폭력의 잔인함과 무차별성은 5·18 당시의 항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광주 사람들은 1980년 5월 18일을 ‘피의 일요일’<sup>2)</sup>이라 부른다. 계엄군의 폭력이 상식에서 벗어나 매우 잔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당시 계엄군의 폭력이 어느 정도였는가는 사망한 날짜별로 사망 원인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표 1>)와 부상자들이 부상당한 날짜별 분포(<표 2>)를 통해 알 수 있다.

사실 5월 18일과 19일, 그리고 20일, 3일간에 걸쳐 자행된 공수특전단의 행위는 시위진압이 아니라 학살극이었으며, 그만큼 잔인했다. 이는 그 시기에 발생한 시신들 중 자상과 타박상으로 인한 시신이 14건이라는 점과 사망자의 39.8%(<표 1>), 부상자의 52.1%(<표 2>)가 그 시기에 발생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시민들은 그 장면을 보고 “광주 사람 다 죽인다”고 생각했다. 진압봉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고, 질

〈표 1〉 사망일 및 사인별 사망자수

사망 원인	사망일										합계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불명	
자상			1						1	1	4
치량사			2	4	2						8
총상			48	24	19	9	2	1	27	1	131
타박사	2	4	7	1	2	1		1			18
합계	2	4	58	29	23	11	2	2	28	2	161

\*광주지검검시조서, 1980, 광주광역시 5·18시료편찬위원회, 1999,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20권의 내용을 필자가 통계처리함.

〈표 2〉 5·18 당시 날짜별 부상자수

구분	사망일												합계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사건 이후	날짜 미상	
수(%)	40 (15.9)	48 (19.1)	43 (17.1)	67 (26.7)	18 (7.2)	5 (2.0)	1 (0.4)	0 (0)	0 (0)	10 (4.0)	4 (1.6)	15 (6.0)	251 (100)

\*5·18기념재단에서 1999년경 구술체록한 피해자 실태조사의 원본을 분석해 필자가 정리함.

질 끌려가 트럭 위로 던져지는 광경은 이미 인간이 아니었다. 광주 사람들이 떠올린 것은 한국전쟁과의 비교였다. “6·25 때도 이렇지 않았다”는 표현은 당시의 증언 속에서 매우 많이 발견된다. 이미 광주 사람들은 광주 사태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전쟁’으로, 그리고 ‘전쟁’의 또 다른 경험인 ‘학살’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계엄군의 폭력이 갖는 무차별성도 전 시민적인 항쟁을 야기한 한 가지 원인이 됐다. 이런 점은 연령별 분포와 저항할 수 없는 자에 대한 폭력의 행사에서 드러난다. 사망자의 연령 분포는 20대가 절대 다수(42.2%)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의 연령층도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0대의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27.3%)과 시위와는 무관한 연령층으로 판단할 수 있는 50대 이상의 비중(6.2%)이 만만치 않다는 점은 당시 계엄군의 무차별적인 폭력의 행사를 짐작케 한다.<sup>10</sup> 이런 사실들은 계엄군의 폭력이 매우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결국 당시 광주 지역에서 저항공동체를 형성시킨 계기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14일~16일의 민주화 시위를 통해 형성된 시민들의 동의와 김대중 구속이라는 상징적 사건으로 인한 시민들의 좌절과 분노, 그리고 계엄군의 비인간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력 행사가 그것이다. 특히, 계엄군의 폭력은 기존의 지역 네트워크와 민주화 시위 및 김대중 구속을 통해 형성되어 있던 심정적 수준의 연대가 저항공동체로 구체화 되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력은 시민들에게 짐승 같은 삶이나 인간다운 저항이나를 택일하게 만들었고, 폭력의 무차별성은 시민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일종의 운명공동체로 바뀌게 한 것이다. 그 결과 5월 18일부터 21일에 이르는 사이에 광주 지역에는 상식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저항공동체가 형성됐다. 다음의 증언은 그런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

9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5·18의 첫 사망자는 김경철인데, 그는 언어 및 청각장애자이다. 그는 5월 18일 오전 금남로 2가 부근에서 공수부대원에게 구타당해 그 다음날인 19일 육군통합병원에서 사망했다. 공수부대원들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인에게 죽을 때까지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목격자는 그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비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 이 사건은 당시 계엄군의 폭력이 지닌 무차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5·18 광주민중항쟁유족회, 1989: 235).

10 「광주지검 검시조서」, 광주광역시 5·18 사료 편찬위원회, 1999,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자료총서』 20권의 내용을 필자가 통계 처리했다.

동창회 친선 축구대회를 마친 우리들은 ... 금남로까지 걸어가다. 동방생명 사거리 앞에서 있던 공수부대가 달려들어 우리들을 구타했다. (...) 집에 들어가 있는데 부아가 치밀었다. (...) 대학에 다니던 앞집 두 아들이 가택수색을 하던 공수부대원에게 구타를 당했다. (...)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던, 모범생이었던 절친한 친구가 공수부대에게 맞아서 집에 누워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울화가 치밀었다. 그때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조성환, 현대사사료연구소 1990: 306).

그런데 광주 지역에서 만들어진 저항공동체는 지역주의적인 틀 내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전 시민들의 동의가 형성됐던 민주화 시위는 광주 지역만의 경험이었다. 김대중 구속에 대한 분노와 좌절 역시 지역 분할적인 정치적 지형 때문에 광주·전남 지역에서 가장 강하게 표출됐다. 또 이런 요인들 때문에 계엄군의 진주에 분산적인 소규모 저항이 일어났고, 이들 저항은 계엄군의 폭력이 가장 격심하게 표출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계엄군의 무차별하고 무차별적인 폭력 역시 광주 시민들만의 역사적 경험이었다. 당시의 유언비어들 중 가장 위력적인 것은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사람의 씨를 말린다”(현대사사료연구소 1990: 347)이며,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증언은 “광주 사람 다 죽는다”이다. 이와 같은 지역주의적 요소들은 저항의 발발과 지역민들의 자발적 참여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지만, 항쟁의 확산이나 항쟁이 보편적인 의미를 획득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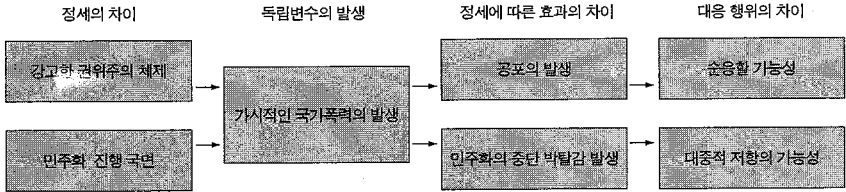
## 2) 강탈당한 민주화와 저항의 도덕적 정당성

국가폭력이 반드시 폭력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저항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이런 국가폭력은 대상 집단에게 공포를 주면서 소기의 목적 달성에 성공하고 있다. 반면 국가폭력에 대응해 저항이 발생하는 경우는 소수의 사례들에 그치고 있다. 저항과 순응이라는 대응 행위의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정세의 차이이다. 즉, 정의롭지 않은 국가폭력이 발생했을 때 민주화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저항할 가능성이 크지만, 권위주의적 권력이 강력할 때에는 순응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이와 같은 정세의 차이가 가져오는 서로 다른 효과는 고전적인 사회운동론(상대적 박탈감 이론, J곡선 이론 등)에서 이미 확인된 것이다. 즉 절대적인 빈곤보다는 빈

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대중들의 저항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지는 민주화에 대한 기대 수준의 상승과 충족 수준의 하락이 발생할 때, 대중적인 봉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볼 때, 5·18의 발발에 미친 '79·80 레짐'의 효과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일반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기대 수

〈그림 1〉 정의롭지 못한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과 순응에 미치는 정세의 효과<sup>11</sup>



준이 높아진 반면, 5월 17일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는 국민들에게 민주화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케 했기 때문이다.

5·18 당시 계엄군의 투입 및 진압 작전은 1970년대 유신 체제의 논리에 입각해 있다. 그것은 광주의 시위대를 국가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며, 내부의 적은 외부의 적보다 더 가혹하게 취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을 적으로 돌릴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조치는 분단 체제와 국가안전보장(National Security) 논리에 의해 정당화됐다. 그것은 획일성을 사회 질서로 생각하면서,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세력이나 행동은 내부의 '적'으로 간주하며, 그런 '적'은 외부의 적에 앞서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설정한다. 이는 전형적인 파시즘적 논리지만, 1980년 5월의 계엄군이 보여주었던 폭력적인 진압 행위에 내재해 있는 논리이기도 하다.

반면 당시 시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과 1980년 봄을 계기로 민주화에 대한 기대치를 한껏 높인 상태였다. 무엇보다도 시위대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계엄군과 달랐다. 시민들은 우선 14일부터 16일까지 이뤄진 광주 지역 학생들의 시위에 동참하면서 그에 대한 동의와 지지를 표시하고 있었다. 또 당시 광주 지역의 학생들은

11 <그림 1>은 정세의 차이만을 고려한 모델이다. 여기에 다른 변수들이 추가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정세의 차이는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항쟁이 발생한 곳은 광주 지역뿐이었다. 이는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16일까지의 시위가 끝난 후 정부의 민주적인 조치를 기다리며, 시위를 자제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기대와는 정반대 방향인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민주 인사에 대한 검거가 시작되자, 이를 민주화에 정면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상황에서 18일 전개된 학생들의 시위는 당연한 것이었다. 이런 태도는 '79·80 레짐'(정근식 2000a) 시기에 형성된 민주화 요구 및 그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견고한 것이었다. 오히려 비상계엄의 확대와 강경 진압을 결정한 신군부가 현정질서 자체를 파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sup>12</sup> 이와 같은 국가권력과 시민들 사이의 인식의 차이는 다음의 인용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호용 장군이 윤희정 장군에게 “중앙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만 계엄 확대 조치에도 이렇게 소요가 계속된다면 가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계엄군의 확고한 결의를 보여줌으로써 초기에 군중들의 심리를 가라앉혀야 옳지 않겠습니까?” 정호용 장군이 다시 진언, “그런데 광주 시내의 기관장들이 대책을 협의하는데 그걸 보니까 이번 광주 시민이나 학생들의 데모가 오히려 정당한 것인 양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5·18 계엄군의 「작전 상황 보고서, 『말』, 1988년 5월).

당시 군의 수뇌부, 특히 신군부의 일원이었던 정호용은 광주 지역 기관장들이 시민들의 데모를 정당하게 여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계엄군의 확고한 결의를 보여줌으로써 초기에 군중들의 심리를 가라앉혀야 옳다고 보고 있다. 이에 비해 광주 시민들은 자신들의 저항을 민주화를 위한 것으로 여기면서 정당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평소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시위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던 기관장들마저도, 당시의 시위만은 정당한 행위로 생각했다는 점은 그런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런데 이런 도덕적 정당성이 대중의 자생적인 저항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정의롭지 못한(injustice) 행위가 있고, 그에 대한 개개인의 분노와 저항이 부딪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켜야만 한다.<sup>13</sup> 도덕적 정당성에 의한 자생적인 저항은 대중들이 현

---

12 이에 대해서는 1996년에서 1997년 사이 사법부의 재판 판결(1997년 4월 13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 폭력으로 세워진 질서가 법에 의해 부인되는데 무려 17년이나 걸린 것이다.

실적인 냉정한 계산을 하기 시작할 때에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계엄군의 철수 및 해방 공간에서의 이데올로기 공작은 대중의 자생적 저항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해방 공간이 만들어지고 도덕적 정당성은 내면화됐지만, 그 과정에서 광주 지역은 고립됐다. 승리할 가능성은 전혀 찾아볼 수조차 없는 싸움이 다가오고 있으며, 저항공동체의 내부에서는 서서히 구성요소들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중들이 주도하는 자생적 저항의 가능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

### 3) 촉발 계기의 형성과 대중(multitude)의 자생적 저항

물리적인 국가폭력에 대한 자생적이고 자율적이며 직접행동에 의한 저항은 역동적인 대중 속에서만 가능하다. 대중의 역동성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대중들 사이의 연대나 네트워크,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 부여 등이 중요하지만, 그것들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 역동성을 촉발시키는 계기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계기들은 조직적인 수준에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비조직적인 형태의 수많은 우연적인 사건들이 모여서 형성되기도 한다.<sup>14</sup>

5·18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계기들이 비조직적인 수준에서 만들어졌으며, 그런 점이 오히려 저항의 폭발력을 높인 요인이었다. 즉 항쟁을 이끌어간 주체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한 사례는 거의 발견할 수 없으며, 그보다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참상을 목격하면서 즉자적으로 항쟁에 참여한 경우들이다. 설령 1970년대 사회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이 항쟁에 참여한 경우에도, 그것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뤄졌으며 조직적인 수준에서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점은 현장에 가깝게 있었거나 항쟁에 참여했던 부상자 및 구속자들이 밝히는 참여 동기에서 잘 드러난다(<표 3>).

<표 3>에 따르면 총 조사자 419명 중 항쟁에 참여했다고 밝힌 사람은 277명이었다. 이 중 참상 목격이나 동참 의식을 항쟁 참여의 이유라고 밝힌 사람이 각각 27.4%와 43.6%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당시 참여 행위의 자생성과 직접행동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반면 1970년대 조직운동가들의 참여는 별 다른 비중을 차지하

<sup>13</sup> 카치아피카스는 이를 에로스 효과(erros effect)라 부른다(Katsifkas, 1999: 44~45).

<sup>14</sup> 이때의 대중은 앞의 '주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차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망과 지배/피지배 구도 내에서 5·18이라는 계기를 맞이해 각각 지배세력에 저항한다.

〈표3〉부상자 및 구속자의 참여동기별 분류 명(%)

동기 분류	참상목적	동참의식	타인의권유	본인및 연고자피해	사회운동 조직참여자	불명	합계
	부상자	34(13.5)	79(31.5)	3(1.2)	3(1.2)	4(1.6)	128(51.0)
구속자	42(25.0)	42(25.0)	7(4.2)	10(6.0)	53(31.5)	14(8.3)	168(100)
합계	76	121	10	13	57	142	419

\*5·18기념재단에서 1999년 경 구술채록한 피해자 실태조사의 원본을 분석해 필자가 정리함.

\*직접참여동기에 대한 질문을 던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불명확한 답변의 비율이 높음. 또 부상자의 경우에는 참여자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명의 비율이 높음.

지 못하며(20.6%), 그나마도 참여자들의 경력이 그렇다는 것이지 참여 자체가 조직적인 수준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다.

비록 조직되지 않은 대중들의 즉자적인 저항이 모여 항쟁을 구성했지만, 5·18 당시의 항쟁은 특정 조직에 의해서 지도되는 저항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주었다. 비조직적인 대중들이 항쟁의 주요 국면에서 창조적으로 다양한 촉발 계기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이를 표로 나타낸 것이 <표 4>이다.

필자가 임의적으로 작성한 항쟁시간표이지만, 이를 통해 당시 항쟁의 주요 국면이 전환하는 데 있어서 대중들의 비조직적이고 자생적이지만 동시에 창조적인 저항형태의 개발이 촉발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당시 항쟁이 발생하고 있는 순간에도 그것이 대규모의 처절한 저항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총을 든 무장투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의 간부들도 피신했던 것이다. 또 당시 시민들의 분산적인 저항이 대규모 민중봉기로 나아가는 것을 주도한 조직은 없었다. 대중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생적 저항이 전체 대중들의 봉기를 만들어내기에 이른 것이다. 대중들은 서로의 참여를 통해 힘을 얻으면서 자생적인 저항의 주체가 됐다. 1980년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민군의 등장이 그 좋은 예이다. 그것은 오직 대중적 저항이 지닌 자생성의 표현이며, 저항의 외중에서 표출되는 창조적인 힘이였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대중과 계급론적 담론 사이의 관계이다. 계급론적 담론이 저항의 중심과 노동자들의 주도성을 강조한다면, 대중은 저항의 중심을 거부하고 오히려 참여자들의 주변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석공이라는 직업을 보면 계급론적 담론은 그것을 노동자라는 거대 담론의 부분으로 파악하

〈표 4〉 5·18의 국면 전환을 가져온 촉발 계기들

주요 국면 전환	촉발 계기	항쟁의 주체
항쟁의 발생	18일 오전 10시경 전남대 정문 앞의 비조직적이고 자생적인 학생시위	비조직적인 학생대중
시민들의 개별 참여	계엄군의 잔인한 진압과 학생시위대의 총동원, 이를 보도한 비조직적이고 자생적인 언론	비조직적인 학생대중 및 시민들의 개별 참여
공격적인 항쟁의 시작	18일~19일까지의 계엄군의 잔인한 폭력에 분노한 시민들의 비조직적이지만 집단적인 참여	비조직적이고 자생적인 광주 시민들의 집합
민중봉기로의 발전	20일 저녁 민주 기사들의 봉기	광주 지역의 대중들
무장투쟁으로의 발전	계엄군의 발포	광주 지역의 대중들
해방·광주와 항쟁의 확산	계엄군과 시민군 사이의 총격전	광주 지역의 대중들
지도부의 성립과 분열	광주 지역민 내부의 갈등 (총기반납 및 수습/항쟁의 지속)	광주 지역의 대중들
항쟁 지도부의 탄생	시민결기대회	광주 지역의 대중들과 조직화된 학생운동 지도부
항쟁의 종료	계엄군의 진압 작전과 시민군의 패배	시민군

\* 항쟁일지를 보면서 필자가 작성했음. 촉발 계기와 국면 전환의 구분이 다소 애매하지만, 촉발 계기는 국면의 전환을 가져온 사건을 의미한다.

지만, 대중에 대한 논의에서는 석공 그 자체로 받아들이며 그것의 불안정성과 주변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대중의 특성이 항쟁의 과정에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한다.

### 패배를 넘어선 저항

21일 저녁 광주 지역에 해방공간이 만들어진 이후 계엄군과 시민군 사이에 가장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진 것은 27일 새벽이었다. 그날 계엄군이 다시 광주 시민들의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작전을 전개하면서 계엄군과 시민군 사이에 시가전이 벌어진 것이다. 당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양측의 무장 병력은 비교가 안됐다. 무장력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헬기 등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무기를 동원한 계엄군과, 대부분이 칼빈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실탄마저 부족한 시민군 사이의 싸움

15 대중들의 역동성이 일단 발휘되면 일상적인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가지 계기들을 창조적으로 만들면서 새로운 형태의 운동을 만들어간다. 대표적인 예로 전옥주라는 탁월한 선동가의 등장과 20일 저녁의 차량 시위를 들 수 있다.



이었다. 병력 수 역시 상대가 될 수 없었으며, 조직적인 역량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시민군의 열세였다(<표 5>). 말이 전투이지 일방적인 학살이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항쟁의 초기 국면에서 발휘됐던 대중들의 자생적인 저항이 불가능한 시점이었다. 저항적인 공동체는 내부 차이와 분단 체제를 동원한 이데올로기 공세로 인해 분열된 상태였다. 광주 시민들이 갖고 있던 도덕적 정당성은 여전했지만, 그것을 자생적 저항으로 표출하기에는 너무나도 냉정한 계산이 각자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다. 대중의 역동성이 표출될 수 있는 계기는 해방공간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이런 상태에서 5월 18일 이후 21일까지 전개됐던 대중적인 저항은 기대할 수 없었다.

그 결과 27일 새벽의 광주를 지킨 것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26일 밤 도청으로 들어간 수백 명의 무장 시위대였다. 이들의 참여는 확실히 그때까지의 참여와는 구별

<표 5> 5월 26일 밤 시민군 배치 상황과 계엄군 배치 상황 비교

시민군의 배치 상황		계엄군 배치 상황		
장소	내용	타격 목표	부대	병력
도청	기존 시민군, 지동타격대, 항쟁 지도부, 학생 등 200~500여 명	도청	3공수여단	14/66
YMCA	고등학생 등 60여 명이 총기조작 훈련 중 새벽 3시경 도청 진입	광주공원	7공수여단	33/224
YWCA	여성 50여 명, 경비담당 20여 명	YWCA	11공수여단	4/33
전일빌딩	40여 명, LMG 기관총 설치	전일빌딩	"	"
전대병원 옥상	수 미상, LMG 기관총 설치	관광호텔	"	"
유동삼거리	10여 명(본부 인원)	광주시	공격 부대	252/4,035 56/693
계림국민학교	30여 명의 병력이 배치됨	전지역에	: 20사단	
서방시장	수 미상, 화동, 화운동, 지원동 30여 명의 시민군 및 예비군	대한	: 31사단	
학동, 학운동, 지원동	30여 명의 시민군 및 예비군	분할 점령		
덕림산	20여 명의 본부 인원, 지역 예비군			
		외곽 봉쇄	보병학교	24/548
			포병학교	36/620
			기갑학교	19/1,522

\* 5·18에 관한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 필자가 작성함.

\* YWCA는 1980년 당시에는 금남로 1가에는 있는 현 전일빌딩 뒤편에 있었음.

\* 계엄군의 병력 상황 중 00/00은 장교 수/사병 수를 의미함.

되는 행위였다. 당시 광주에서는 계엄군의 진입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또 그때까지 계엄군이 해왔던 행태로 보아 다시 한번 치참한 유혈극이 전개될 것이라는 사실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 따라서 마지막 항쟁을 주도했던 사람들도 그런 사실을 주지시키면서 참여자들의 자발성에 의한 참여를 강조했다. 다음의 증언을 보자.

26일 밤 윤상원이 당시 상황을 얘기하고는 “굳은 각오가 아니면 지금 상황을 헤쳐 나아가기가 어렵다. 굳은 각오와 결의가 없는 사람은 지금 나간다고 해도 말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말로 다시 한번 다짐을 주었다(천영진, 현대사사료연구소, 1990: 786).

26일 밤부터 27일 새벽까지 차량을 이용해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던 방송 내용도 그런 사실을 숨기지 않고 알리고 다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에 달하는 무장 시위대가 도청으로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가 단순한 절망감의 소치였거나 무작정 삶을 포기함이 아니었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방송 내용에서 드러난다. “우리들은 죽습니다. 부디 우리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떠한 이유로 마지막 전투에 참여했을까? 다음의 증언을 보자.

누군가 큰 소리로 “동지의 피 값, 광주 시민의 피 값을 저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 우리는 무기를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새롭게 했다(김한중, 현대사사료연구소 1990: 310).

이들의 참여는 그전 시기까지의 참여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이들의 증언 속에서 계엄군에게 승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찾아볼 수 없다. 최후까지 항쟁한 시민군들은 오히려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죽음을 통해 5월 18일 이후의 대중적인 저항을 저버리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이들은 윤상원 등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5월 18일 이전까지 사회운동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냉정한 상태에서조차 죽음을 각오하고 무장투쟁에 가담한 것은 전적으로 10일간에 걸친 경험의 결과였다.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행위가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경험이 소중하다는 것을 죽음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27일 새벽에 전개된 계엄군의 무력진압으로 몇 명이 사망했는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다. 당시 계엄군 측의 발표는 “무기를 내놓기를 거부하다가 사살된 사람은 17명이

다”<sup>16</sup>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역별 사망자에 대한 군부대의 보고서가 각기 다르다는 것은 이 보고 자체가 왜곡됐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그 후 1980년대 말의 확인 작업에서 이름이 확인된 사망자 수만 하더라도 30명 정도에 이르며, 1989년 6월에 발표된 미국 행정부의 성명서(미국 정부, 1989년 6월)나 그 외 대부분의 자료들은 당시 사망자가 30명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군 진압 작전으로 최소한 3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의 죽음을 통해 5·18은 항쟁의 의미를 완성했으며, 이후의 5월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 맺는 말

본 연구는 5·18의 발발과 참여에 대한 기존의 견해들, 특히 구조적이고 계급론적인 틀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다. 구조적인 모순이나 계급적 상황은 한국의 여타 지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만으로는 당시의 저항 행위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물론 이런 연구들은 한국의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형성된 광주·전남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항쟁의 발발을 설명하려 하지만, 거대 담론을 통해 현실을 설명하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왜 다른 지역에서는 별다른 저항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광주에서는 그런 저항이 가능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려는 노력이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당시의 구체적인 현실에서 출발해 계엄군의 야만적인 폭력과 민간인 학살을 통해 광주에서의 저항을 설명하고자 했다. 나아가 야만적이고 무차별적인 국가폭력이 발생할 때, 저항의 발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찾아보려고 했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는 세 가지이다. 저항공동체의 형성과도덕적 정당성, 그리고 대중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촉발 계기들이 그것이다. 광주의 경우 이들 요소들이 서로 결합하면서 평상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또 당시의 조직적 역량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거대한 대중들의 봉기를 형성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가폭력은 저항공동체가 구체화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대중들의 도덕적 정당성을 강화시켜 주는 요인이자, 대중들의 자생적 저항이 역동성을 발휘할 수

16 이에 관한 모든 군 자료는 사망자 수에서는 17명으로 일치하지만,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가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정상용 외 1990: 311).

있도록 자극을 가하는 촉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요소들은 국가폭력에 따른 대중봉기에서 필수적인 구성요소인가? 이에 대한 답은 아직 내릴 수가 없다. 정의롭지 못한 지배가 매우 극심한 상태에서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를 설명한 무어의 경우, 무저항과 순종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피지배자들이 그와 같은 지배 자체에 대해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Moore 1978). 그러나 이런 논리로 무저항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저항을 설명할 수는 없다. 저항이 일어난 경우 주체들이 스스로의 행위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저항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저항 사례들을 통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

최정기 jgchoi@humanrights.go.kr | 국가인권위원회, 사회학 박사. 논저로는 『비전향 장기수』, 「정치적 민주화와 정치범에 대한 처벌의 변화」 등 다수.

## 참고문헌

- 5·18 광주민중항쟁 유족회, 1989. 『광주 민중항쟁 비망록』, 남풍.
- 광주광역시 5·18 시료편집위원회, 1999. 『5·18 광주 민주화운동 자료총서』 20권.
- 김영범, 1999. 『집단학살과 집합기억 - 그 역사를 위해』, 제주 4·3 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냉전 시대 동아시아 양민학살의 역사』, 제주 4·3 연구소.
- 박만규, 2000. 『신군부의 광주항쟁 진압작전과 미국정부의 개입』, 5·18 20주년 기념 학술연구 결과보고, 『5·18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재조명』,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 손호철, 1995. 『80년 5·18 항쟁: 민중항쟁인가 시민항쟁인가?』, 『해방 50년의 한국 정치』, 새길.
- 안종철, 2000. 『광주 민중항쟁의 전개과정 연구 - 시민군의 형성과 활동을 중심으로』, 5·18 20주년 기념 학술연구 결과보고, 『5·18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재조명』,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 오수성, 1990. 『광주 5월 민중항쟁의 심리적 충격』, 광주현대사료연구소 편, 『광주 5월 민중항쟁』, 풀빛.
- 윤재걸, 1988. 『작전명령 - 화려한 휴가』, 실천문학사.
- 정근식, 2000a. 『부마항쟁과 79-80 레집』, 『지역사회학』 2호, 한울.
- 정근식, 2000b. 『부활 광주?: 과거-현재-미래』, 『문학과 사회』 50호, 2000년 여름, 문학과 지성사.
- 정상용 외, 1990. 『광주 민중항쟁』, 들레개.
- 정수만, 1998. 『5·18과 인권침해사태』, 5·18 민중항쟁 제18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제)5·18 기념재단, 『5·18 민중항쟁 제18주년 기념행사 자료모음집』.
- 정해구 외, 1990. 『광주 민중항쟁 연구』, 세계질.
- 최정기, 1997. 『광주 민중항쟁의 지역적 확산과정과 주민참여기제』, 나간채 엮음, 『광주 민중항쟁과 5월 운동 연구』,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 최정운, 1999. 『오월의 사회과학』, 풀빛.
- 한국현대사료연구소, 1990. 『광주 5월 민중항쟁사료 전집』, 풀빛.
- 한상진, 199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본 국민주권과 승인투쟁』, 5·18 국제 학술심포지엄, 『세계화 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 - 광주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제)5·18 기념재단.
- 황석영 전남사회운동협의회 정동년 외 321인 한국현대사료연구소, 1996. 『5·18 그 삶과 죽음의 기록』, 풀빛.
- Arendt, Hannah, 김정환 옮김, 1999. 『폭력의 세기』, 이후.
- Corradi, Juan E., Fagen, Patricia Weiss & Garret, Manuel Antonio, ed., 1992. *Fear at the Edge: State Terror and Resistance in Latin America*, Berkeley-Los Angeles-Oxfor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atsiaficas, George, 이재원·이종태 옮김, 1999. 『신좌파의 상상력』, 이후.
- Giddens, Anthony, 진덕규 옮김, 1991. 『민족국가와 폭력』, 심지원.
- Gould, Roger V., 1993. "Trade Cohesion, Class Unity and Urban Insurrection," *AJS*, Vol. 98.
- Guattari, Felix & Antonio Negri, 이원영 옮김, 1995. 『자유의 새로운 공간』, 갈무리.
- Harff, Barbara and Ted Robert Gurr, 1988. "Toward Empirical Theory of Genocide and Politicides: Identification and Measurement of Cases since 1945,"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2, No. 3.
- Moore, Barrington Jr., 1978. *Injustice: The Social Bases of Obedience and Revolt*, New York: M. E. Sharpe Inc.
- Negri, Antonio, 윤수중 편역, 1996. 『지배와 사보타지』, 새길.
- Negri, Antonio, 윤수중 옮김, 『자유의 새로운 공간』, 미간행 번역물.